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요청

1. 민원개요

- 신청인의 주택에 낙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거실과 주방 일부가 소실되고 그을음이 발생하여 7,785천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
- 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원인을 자연적 요인(재해)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시 재난부서에 재난지원금 신청하였으나 주택의 경우 반과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어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됨.
-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소파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조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음.

2. 신청인의 주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관련법에 따르면 낙뢰로 인한 재해는 자연재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호우로 주택이 약간의 침수가 되어도 보상이 되는데 거주공간이 완전히 소실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함.

3. 피신청인의 주장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市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재난의 원인(낙뢰)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

4. 사실관계

- 경기도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및 상황보고서를 보면 자연적(낙뢰)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천장 및 바닥 일부 소실 및 그을음과 냉장고·TV·에어컨·소파·주방가재도구 일체 소실됨. 이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소파에 해당됨.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 제1항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주택의 경우 주택의 주요부가 50%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주택은 ○○소방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파이므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대상이 아님.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동 규정에서는 주택의 경우 반파이상이 대상이므로 신청인의 주택피해인 소파의 경우 규정에서의 지원대상이 아님.

5. 판단

-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난피해의 복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 피해자에게 생계안정과 사회복귀,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과 조례 재정 취지와 함께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바, 낙뢰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후단의 재난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조례 해석은 조례의 재정이유, 기본원칙, 적용범위 및 상위법과의 체계적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임.

-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는 조례 제6조 제1호 후단에 해당하므로 道가 재난피해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추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도개선 권고하기를 의결함.

6. 처리결과 : 수용

- ○○시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 협의 추진

※ 참고 1. 의결서



의 결

경 기 도 옴 부 즈 만

경기도음부즈만 의 결

의안번호 제 15 호

의 안 명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요청

신 청 인 ○○○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본부장)

주 문

신청인의 주택피해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후단에 따라 재난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신청인은 주택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경기도의회 공고 제2014-76호), 기본원칙(제2조), 적용범위(제5조)의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지원기준(제6조)은 규정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추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6년 4월 28일

대표옴부즈만 황 지 연

옴부즈만 김 현 숙

옴부즈만 손 교 명

옴부즈만 이 두 열

옴부즈만 장 태 범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2016년 3월 5일 15시경 신청인의 주택(○○시 ○○구 ○○로 ○○○번길, ○층 다가구 주택)에 낙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거실과 주방 일부가 소실되고 그을음이 발생하여 7,785천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원인을 자연적 요인/자연적 재해(낙뢰)로 확인하였음. 이에 ○○시 재난부서에 재난지원금 신청하였으나 주택의 경우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 이상의 피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신청인은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서는 소파(전파와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피해로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고, 기둥 벽체 지붕 등의 파손 또는 보조재 피해로 인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조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경기도 읍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2. 신청인의 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관련법에 따르면 낙뢰로 인한 재해는 자연재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호우로 주택이 약간의 침수가 되어도 보상이 되는데 거주공간이 완전히 소실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재난피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담당부서에서 본 건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항이 이해되지 않는다.

3. 피신청인의 주장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市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재난의 원인(낙뢰)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4. 사실관계

가. 경기도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및 상황보고서를 보면 자연적(낙뢰)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천장 및 바닥 일부 소실(10제곱미터) 및 그을음(40제곱미터)과 냉장고·TV·에어컨·쇼파·주방가재도구 일체 소실됨. 이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호 소파에 해당된다.

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 제1항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주택의 경우 주택의 주요부가 50%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주택은 ○○소방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파이므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동 규정에서는 주택의 경우 반파이상이 대상이므로 신청인의 주택피해인 소파의 경우 규정에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5. 판단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난피해의 복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 피해자에게 생계안정과 사회복귀,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제2조), 그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4.8.12.) 제정이유에서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피해 중에서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피해복구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하여 최소한의 피해 지원으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한다고 했다.

위 조례는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 및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조례 제3조 제1호), 위 법률은 재난에 대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당해 민원의 경우 낙뢰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위 법 제3조 제1호가목이 규정한 자연재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위 조례 제6조(지원대상)는 “도지사는 도 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재난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2. 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보상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재난복구가 지연되어 사회안정과 평온을 저해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 제6조를 위 법 제3조 제1호의 가목 자연재난과 나목 사회재난의 경우로 나누어 적용해보면, 먼저 나목에 규정한 사회재난의 경우 ①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있고 그 원인자에게 피해보상 자력이 있는 경우 그 원인자가 책임을 지고, ②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있으나 그 원인자에게 피해보상 자력이 없는 경우 조례 제6조 제2호에 도가 재난피해에 따라 보상할 수 있으며, ③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재난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도가 재난피해에 따라 보상할 수 있고, ④ 그 밖에 재난복구가 지연되어 사회안정과 평온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원인여부에 관계없이 조례 제6조 제3호에 따라 도가 재난피해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가목에 규정한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의 원인은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자연현상 그 자체로서 인격이나 그에 따른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①과 ②는 그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여, 원인자의 피해보상자력을 논할 필요 없이 조례 제6조 제2호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재난의 경우 조례 제6조의 제1호와 제3호만이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제3호의 적용은 재난의 원인여부에 관계없으므로 당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자연재난의 경우 위 ④의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③의 경우만이 문제되며,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조례 제6조 제1호 전단에 해당하고,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제6조 제1호 후단의 재난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원인을 알 수 있는 자연재난의 경우에 국민(도민)에 대한 보호가 흠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낙뢰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6조 제1호 후단의 재난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조례 해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례의 제정이유, 기본원칙, 적용범위 및 상위법과의 체계적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는 조례 제6조 제1호 후단에 해당하므로 도가 재난피해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해석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구분 없이 지원대상을 규정한 조례의 문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추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례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택피해의 경우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경기도 조례의 제정이유, 기본원칙, 적용범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 제6조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하기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 본 입 니 다.

2016. 4. 28.

경 기 도 음 부 즈 만